

“現 의료체계, 오미크론 감당 못해... 유연한 방역 전환해야”

중앙임상위, 오미크론 대응 기자회견

“무수히 많은 경증환자 발생 예상 전 의료기관 환자진료 동참해야 고비 잘 넘기면 일상회복도 가능 오미크론, 팬데믹의 마지막 고비”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2022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지금 같은 K-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네 병원까지 전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동참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오미크론을 통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부지에서 오미크론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

혔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설 연휴 전에 오미크론 전국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1주 0.3%였으나 1월 1주 12.5%로 급증한 상태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와 확연히 다르다”며 “기존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로는 오미크론 대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감염자 입원율은 델타변이의 40~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달 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오미크론 확진자 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중 21명(52.5%)은 증상이 있었고 19명은(47.5%) 무증상이었다.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모두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이였다.

이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증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려면 그동안 유지해온 K-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맞지 않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모든 코로나19 환자 진료는 중증 폐렴 진행과 사망의 가능성에 대비해왔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무수히 많은 경증환자를 발생하게 한다”며 “엄격한 K-방역은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동참하는 의료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료, 민간은 비코로나19 진료라는 이분법적 전략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대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려면 코로나19 진료를 기존 의료 서비스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오미크론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미크론을 잘 넘으면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진정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미크론이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 고비를 넘는데 2개월이 안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파트 붕괴 등 안전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文 대통령, 잇따른 안전사고 사태수습 “肅 등 전 부처, 국민보호 책임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신축아파트 구조물 붕괴 및 KTX 탈선 사고와 관련 12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58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을 운행 중이던 부산행 KTX-산천 23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 버스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까지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은 재난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경찰관 직무집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먼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가 골자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경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김정은, 2년만에 발사현장 참관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핵보유 5개국 발표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금지 공동성명’을 무색하게 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시험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이후 약 2년만에 침묵을 깨고 시험발사현장을 참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북한 모처에서 모니터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11일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의 활공 비행체(HGV)는 발사지점 600km 지점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해 240km를 선회기동했다. 비행거리도 한국군당국이

밝힌 700여km보다 300km를 더 날아가 설정표적에 명중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형상은 지난해 9월 때와는 달랐지만, 지난 5일에 발사된 ‘원뿔형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과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이 사거리를 늘리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양산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ainm@

‘비순정부품 사용시 성능 저하·고장 유발’

현대·기아차 ‘허위·과장’ 취급설명서 경고

공정위 “품질 떨어진다고 볼수 없어”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현대·기아차의 취급설명서 내용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 및 그 외

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작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것으로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으로 칭하고, 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부품이나 규격품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부른다. 현대·기아차 순정부품은 계열

회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IT 청년채용 지원금 부정수급 80건 달해

고용부, 지원금 반환·일부 고발

지난해 하반기 정보기술(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80여 건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반환을 명령하고, 일부 기업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성과 및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만 15~34세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사태 후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IT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청년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9~11월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예컨대, 일부 기업은 실제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도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거나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한 16건의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 가량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25억7000만원의 제재 부가금도 부과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9건에도 8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